

지방화 시대의 분단과 통일 : 강원도의 시각¹⁾

전 상 인*

◁ 목 차 ▷

- | | |
|-----------------|---------------|
| I. 머릿말 | IV. 통일시대와 강원도 |
| II. 한국 현대사와 강원도 | V. 결 론 |
| III. 분단시대의 강원도 | |

I. 머릿말

이 글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를 강원도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분단 및 통일논의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창구단일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이 글의 초고는 한국사회학회 '97 전기사회학대회(1997.6.14, 영남대학교) 및 강원개발연구원 제2회 강원포럼(1997.9.26,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발표되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코멘트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와 별도로 이 논문에 대해 상세한 비평을 해주신 민족통일연구원의 김성철 박사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한 이 논문은 강원사회연구회(역음) 『강원사회의 이해』(서울:한울, 1997), 356~370쪽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화라는 명분하에서 통일의 주체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고통과 통일의 희망이 전국적으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지역에 따라 분단의 상처가 고르지 않은 만큼 통일에 대한 기대도 높낮이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분단과 통일문제에 관련하여 강원도가 말하자면 제주도나 충청북도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다. 그런만큼 이제 통일논의도 분권화되어야 한다. 수도의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입장과 변방의 지역민이 생각하는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오류이고 지방자치 시대의 규범과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심적인 통일논의는 지방 특수적인 시각과 공존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외교와 안보는 국민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이었다. 그러나 지방화와 세계화가 논의되는 시점에 외교와 통일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간의 외교적 접촉과 교류가 얼마나 흔한가? 이제는 지방과 세계가 국민국가의 매개 없이 직결되는 추세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대북창구 일원화 논리 역시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익을 갖고 있는가? 이를 통해 그동안 얻은 것이 잃은 것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까? 또한 통일을 반드시 일거에 성취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지방간의 남북교류에서부터 출발하여 전국적인 남북 통일을 모색할 수는 없는 것일까? 강원도의 통일을 먼저 이룩한 다음 전국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은 하등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 분단의 일변지이자 통일의 일변지가 될 수 밖에 없는 강원도는 물론, 전국 어느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북한 혹은 통일관련 행정 직제 하나 변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앙정부는 통일의 문제에 관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려는 발상의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할 것이다.

II. 한국 현대사와 강원도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었다. 한반도 중부지방의 동반부를 차지한 강원도는 이로써 분단의 비극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3·8선은 양양군 현북면과 서면, 인제군 기린면과 남면, 그리고 춘천군 북산면과 신북면 및 사북면을 150km 길이로 가로지르며 강원도를 거의 한가운데에서 兩斷했다. 강원도는 11개 군과 82개 邑面을 가진 3·8선 이북과, 10개 군과 91개 읍면을 가진 3·8선 이남으로 나누어졌다. 조선조 太宗 13년(1413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8道制로 실시하면서 현재의 비슷한 형상의 강원도가 만들어진 이후(강원도, 1996 : 202) 일제시대까지도 강원도는 하나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철원, 양구, 화천, 이천, 회양, 통천, 고성, 간성 등 8개 군은 완전히 북한지역으로 넘어갔다. 3·8선은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내면서 두 개의 강원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새삼스러운 인식이지만 강원도는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유일한 道 단위이다.

미군과 소련군 가운데 강원도에 先着한 것은 소련군이었다. 3·8선 이북 지역인 양양군 현북면에는 1945년 8월말, 그리고 춘천군 추전리와 원평리에는 9월초에 소련군대가 진격했다. 그리고 강원도에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의 공백을 틈타 화천 주둔 소련군은 춘천으로, 또한 양양 주둔 소련군은 주문진을 거쳐 강릉까지 南下하여 무력을 과시하기도 한다(유재인, 1974 : 29~32). 강원도에 미군이 처음 나타난 것은 9월 20일 경 춘천지역이었고, 중대급 이상의 부대가 진주하기 시작한 것은 10월말쯤, 그리고 미군정 체제가 강원도에서 확립된 것은 12월초 이후였다. 그동안 강원도에는 일제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주로 건국준비위원회(建準)가 일제가 남긴 국가공권력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해방 직후인 8월 16

일, 춘천에서는 강원도 자치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서울에서 만들어진 건준의 지방하부 조직으로 편입되었다(강원도, 1995 : 59).

이 무렵 강원도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道の 영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 덧붙여, 이념적으로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춘천에 소재하던 建準 강원지부는 보수·좌익계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嶺西地方을 미군이 접수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Cumings, 1981 : 340). 원주 또한 미군정 시대에 전국에서 치안질서가 가장 모범적이었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강원도, 1995 : 60). 그러나 嶺東地方은 사정이 달랐다. 특히 江陵은 일제 말기에 인구변동이 많았고 토지의 半 이상이 米作地라 소작농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지형적으로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강릉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좌익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여 미군 당국은 그곳을 평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상 1946년 봄까지도 강릉지역의 좌익계 인민위원회는 건재하고 있었으며, 그해 가을에 경북지방에서부터 발원한 농민봉기의 불뚝 또한 강릉까지 쉽게 튀었다(Cumings, 1981 : 340~341). 그리고 三陟의 형편도 강릉과 유사했다. 삼척은 일제시대에 혁명적 노동·농민운동이 전개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조성운, 1997), 해방 무렵 삼척은 강원도내 유일한 공업지대로서 3만명의 산업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 여건 때문에 미군정 당국은 행정수부인 춘천에 이어 강원도로서는 매우 빠른 시점인 9월 25일에 군대를 삼척으로 급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릉에서와 비슷하게 미군정은 삼척지방도 오랫동안 접수하지 못했다(강원도, 1995 : 60~61 ; Cumings, 1981 : 340~341).

하지만 영동지역의 좌익계 정치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미군정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이 서울에서 無力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익계가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성을 표명함으로써 그 대중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미군정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비교적 충분한 미군 병력이 道內 전역에 배치되자 大勢는

차츰 미군정 혹은 미군정이 비호하던 우파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우파 정치세력 가운데 특히 이승만이 주도하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獨促)가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이는 미군정하에서 강원도 행정이 표면적으로 미군 軍政官의 권한에 속했으나 사실상 道政은 도청 소재지인 춘천지역 출신 우파 인사들에게 맡겨졌으며, 그들은 주로 이승만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강원도, 1995 : 66~72). 1946년 12월에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立議) 민선의원 선거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국회 의원선거에서 이승만의 독촉세력은 강원도에서 잇따른 압승을 거두었다. 해방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강원도 정치가 이승만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강원도는 지리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반공노선의 최고 전진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은 강원도에서 가장 느렸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특색을 많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강원도 북부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까지도 남북간의 주민왕래와 물물교환이 지속되었다. 춘천군 사북면, 인제군 남면 관대리 부근, 그리고 동해안의 주문진 일대는 당시 남북한 주민간의 대표적인 비공식적 接觸 窓口였다(강원도, 1995 : 90). 또한 군사적으로도 강원도는 불안정했다. 해방 직후 국군의 모체가 된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무렵 강원도에서는 지역을 연고로 한 제8연대가 1946년 4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8년 10월 소위 여수·순천사태의 여파로 대대적인 肅軍작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제8연대 산하 2개 大隊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麗順事態의 시작은 전라남도였지만 종결은 강원도였다고 볼 수 있다. 여순사태의 주도자들이 북한으로 패퇴하면서 오대산과 태백산 등지에서 무장 빨치산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대량의 게릴라를 파견하였기 때문이다(강원도, 1995 : 90~91). 이어서 강원도의 1949년 8월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예행연습이었다. 춘천과 홍천 및 인제 일원에서 남북한 정규군간의 전투는 무려 19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렇듯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발발까지 강원도에는 항상 戰雲이 감돌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6·25 한국전쟁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도 강원도였다. 북한의 상륙부대인 총사령부 직할부대 766부대가 이미 6월 24일에 양양을 출발하여(박명림, 1996 : 432) 이튿날 새벽 3시경에 3.8선 남쪽 명주군 옥계면의 正東港과 삼천군 원덕면의 臨院港에 도착했기 때문이다(강원도, 1995 : 93~94). 전쟁 초기에는 춘천과 홍천, 주문진 등 3·8선 전역이 전투지역으로 변했다. 그러나 전선이 낙동강 일대에서 교착한 이후 맥아더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까지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특이하게도 강원도의 한국전쟁은 북한군의 南進 때가 아니라 유엔군의 反擊 이후 더욱 더 치열해졌다. 그 첫째 이유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강원도가 북한군의 주요 退路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군 패잔병은 10월 이후 북쪽으로 퇴주하면서 울진,²⁾ 삼척, 강릉, 주문진 등지를 습격했으며, 金剛山에 총집결한 11월 18일에는 再南侵을 감행, 춘천을 보름 가량 점령하기도 했다(강원도, 1995 : 99~100). 소위 ‘磨石 피난’이 그것이다. 둘째는 1950년 늦가을에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 戰線이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또한 1951년 7월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국군과 북한군이 ‘땅뺏기’에 혈안이 된 지역이 바로 강원도였기 때문이다. 전투를 놓고 말한다면 한국전쟁은 관문점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끝났다. 당시 강원도가 경험한 처절한 血戰은 지금 현재 강원도가 전국의 도 가운데 가장 많은 90여개의 한국전쟁 관련 유적지와 기념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웅변하고 있다(월간 『태백』 1995/6 : 72~79).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부산에 임시수도를 설치한 것처럼 강원도는 1951년 4월 15일 부터 1953년 7월 30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原州 避難道政 시대를 경험했다. 戰時에 강원도의 소위 未收復地區는 더욱 늘어나 도청의 관할구역은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 강릉, 삼척, 울진 등 8개 군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接敵地區는 유엔군사령부의 관할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전투지구는 완전히 민간행정의 공백 상태에 놓여졌다. 그런데 휴전 이후 3.8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대체됨으로써 강원도가 관할지역

2) 당시는 강원도

을 대폭 넓히게 된 사실은 흥미롭다. 강원도내 182.4km의 휴전선은 양양군과 화천군을 완전히 수복시켰으며 철원, 김화, 양구, 인제, 고성 등의 일부를 以南으로 편입시키게 된 것이다. 휴전협정 조인 이후 완전한 북한 통치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平康, 通川, 伊川 및 淮陽 등 4개군 뿐이다(강원도, 1996 : 97~98). 면적에 관한한 한국전쟁은 강원도의 道勢를 확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1953년 이후 강원도는 본래 전체 면적 25,697 평방 km 가운데 67.8%인 16,896 평방 km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유엔군사령부로 부터 강원도로 완전히 이관된 것은 종전 후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의 일이었다. 강원도에 가장 먼저 드리워졌던 한국전쟁의 그림자는 역시 강원도에서 가장 나중에 거두어졌다.

III. 분단시대의 강원도

한국전쟁이 강원도에게 수복지구를 돌려 주었다는 사실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는 가일층 공고화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주변은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도 최고로 高軍事化되었다. 강원도의 북부 지역은 군사적 공간으로 요새화되었던 것이다. 접경 지역 강원도는 지정학적 성격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직할지나 다름없게 되었다. 더욱이 3년 동안 시종일관 전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강원도는 정치적으로 국가의 반공 노선에 더욱 더 밀착되어 갔다. 원주 피난도정 시절인 1952년 4월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에서나 8월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압도적인 승리를 구가한 이래(강원도, 1995 : 108), 강원도에서는 與黨 選好가 확실한 정치적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역대 선거결과만 놓고 본다면 강원도는 1960년대 이후 30년을 군림한 군부권위주의 정권에도 항상 확실한 지지를 보냈다. 강원도에 야당 바람이 분 것은 지방자치 이후의 일로서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때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된 것이 처음이다.

강원도는 1950년대 전후복구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시대에 있어서 他地域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측면이 많았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존재 이유가 지정학적이고도 군사적인 것에서 찾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설치인데, 이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및 고성 5개 군에 걸쳐 있다. 이들의 면적은 도합 1,048.5 평방 km로서, 해당 5개군 전체 면적의 21.2% 그리고 강원도 전체 면적의 6.2%에 각각 해당한다(강원도, 1990 : 217). 그 밖에도 도내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을 수용하고, 여기에 기타 환경보호 구역 등이 추가됨으로써 강원도는 어느 지역 보다도 강력한 개발 제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전후 한국의 국가적 목표를 안보와 경제발전으로 대별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이 경제발전을 담당했던 것에 비해 강원도에는 유독 안보 의무만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방 무렵 경인지구 및 영남지역과 함께 남한내 3대 공업단지 가운데 하나였던 삼척지방이 戰時破壞 이후 영원히 재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응변하고 있다.

강원도는 국가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스스로는 ‘제3세계’ 혹은 내부적 식민지 위치로 전략했다. 강원도와 국내 發展先導 지역, 예컨대 京仁 및 嶺南地域과의 연계는 고전적 종속관계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에너지源의 유출 혹은 수탈이었다. 우선 분단 이후 북한의 斷電에 의해 극심한 전력난을 겪어온 남한은 휴전 이후 남쪽으로 편입된 華川 수력발전소를 복구함으로써 전후복구와 산업시설 재건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또한 1950년대에 정부는 강원도 남부의 炭鑛地帶를 집중 개발하여 전국의 산업현장과 일반가정에 석탄을 공급했다. 또한 비슷한 무렵 개발에 박차가 가해진 英월군 上東의 중석광 개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重石 수출은 남한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강원도는 국가경제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고갈하면서까지 步哨만 섰던 꼴이 되었다.

강원도는 또한 남한경제의 중요한 젖줄이었다. 주지하는 바대로 경인지구와 영남지역에 이르는 한강과 낙동강은 강원도에서 發源하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대 전후복구 시대의 鑛山 開發에 이어서 1960~70년대 경제

개발 시기에는 강원도의 水資源이 집중 개발되었다. 지금 현재에도 강원도는 전국 수자원의 약 22%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된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 등이 강원도의 지역발전에 직접 기여한 것은 별로 없다. 1990년대까지도 강원도의 주민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 전반기를 빼면 항상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 오히려 환경변화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졌을 따름이다. 인공댐 조성 이후 춘천이 호수와 안개의 도시로 바뀐 사실을 지역민들은 결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수자원 개발사업은 강원도의 개발 제한구역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의 개발용도 지역은 전체 도면적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평균 15.6%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덧붙여 수자원 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이 道內에 널리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진모, 1995a : 14~15). 결국, 강원도의 저개발은 지리적·지형적 원인 보다는 분단체제하의 지정학적·전략적 이유로 설명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강원도는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연히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희생되었다.

한편, 휴전선 북쪽 또 하나의 강원도는 전체 강원도 면적의 40%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현재 155만명 정도로서 남강원도와 대동소이하다. 북강원도 지역은 북한내 타지역에 비해 지하자원도 빈약한 편이며 한국전쟁 당시 피해도 많았다. 이에 북한은 휴전 이후 접경지대인 남부 북강원도를 군사화하는 대신, 북강원도 北部를 상대적으로 발전시켰다(오진모, 1995b : 46~47). 분단 당시 남부 북강원도 최대의 거점 도시였던 철원은 휴전선에 너무 인접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이 포기되었으나, 함경남도에 속하던 元山을 강원도에 편입하여 북강원도 최대의 도시로 육성하였다. 또한 최근 市로 승격된 문천도 북강원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원산은 일제시대 공업도시로서의 명성 대신 金剛山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되었다. 북강원도 지역은 북한에서 몇개 되지 않는 고속(화)도로 가운데 2개를 갖고 있는데, 평양/원산간 고속도로와 원산/고성(금강산) 고속화도로가 바로 그것이다. 원산은 또한 북한의 3대 주요 철도망인 원라선(원산-홍남-청진-나진), 평원선(평양-원산) 및 경의선(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 가

운데 2개를 유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의 발전과 더불어 북강원도 지역은 철도차량 공장이나 트랙터 공장과 같은 주요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있기도 하다.

분단시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개의 강원도는 이처럼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역사에는 逆說도 있고 아이러니도 있다. 분단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분단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동안 강원도는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분단이라는 현실 그 자체가 강원도를 점차 새로운 경제적 資源으로 만들었다. 냉전의 보루로서 강원도에 게는 安保를 상품화할 수 있는 특이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랜 남북대치 상황은 휴전선 일대에 생태계 보존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강원도는 그동안 개발의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개발의 폐해 또한 겪지 않았다. 그리하여 天惠의 강원도 山水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무공해 지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남쪽 강원도의 특이한 상황은 분단시대 북강원도의 현실과도 조화되고 있다. 생태계 유지나 자연환경 보호라고 하는 측면은 남북한 강원도의 사정이 비슷할 것이고, 원산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은 강원도의 북측 배후를 북한지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근대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금강산과 원산은 1987년에 북한이 지정한 9개의 관광지구 가운데 두개이다(윤창운, 1995 : 109).

IV. 통일시대와 강원도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역사의 발단은 冷戰의 해체이다. 물론 분단된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섬이다. 그러나 그 섬은 탈냉전의 바다위에 떠 있다. 통일은 당위가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두 개의 강원도가 하나의 강원도로 합치는 것도 오직 시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

후의 시대가 단순히 분단 이전의 강원도로 원대복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원도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1세기는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이다. 지방화는 강원도의 홀로서기를 재촉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한국속의 강원도가 아니라 세계속의 강원도를 각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추세에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여기로부터 통일 논의에 대한 강원도 고유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는 분단체제 그 자체로 말미암아 강원도에게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의 제반 여건을 자원과 자산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이때 강원도의 넓은 접경지역은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분단상황의 비의도적 부산물로 다가온다. 소위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와 민통선 지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김종규, 1996 : 57~59 ; 권기현, 1996 : 4~23, 문석기, 1996).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 2km 남방한계선까지의 벨트로서 원칙적으로 병력이나 전쟁물자, 군수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에서 공히 重武裝지대(HMZ, Heavily Militarized Zone)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진 비밀이다. 한편, 민통선 지역은 남방한계선 이남으로서 군사보안상의 이유나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5~20km의 폭으로 설정된 구역이다. 민통선 구역의 총면적은 1,528 평방 km로서 그 가운데 1,048 평방 km가 강원도에 속한다. 최근에 들어와 민통선 지역은 차츰 北上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끝으로 접경지역이라 함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포함하는 군 단위의 행정관할지역을 의미한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군이 접경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에 가까운 16,872 평방 km를 차지한다.

접경지역의 많은 부분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철원의 경우 전체 郡면적의 99.9%에 이르고 있으며, 화천은 75.9%, 양구는 57.9%, 인제는 35.9%, 그리고 고성군은 64%에 해당한다. 이는 강원도 북부 5개 군 전체 면적의 66.7%에 해당하는 넓이이며, 강원도 전체 면적

에 비교하더라도 17.5%를 차지한다. 접경지역은 경제적인 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 덧붙여 주민들의 일상 생활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예컨대 일반 주민들은 자신의 화장실도 마음대로 改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근까지도 군인들로부터 자기전 취침 點呼를 받기까지 했다. 강원도 전방 산간지대의 맑은 공기는 그러나 自由의 공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는 분단의 시련과 고통을 톡톡히 경험한 셈이다. 그런데 바로 그 接境地域이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대에 새로운 자원과 자산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소위 ‘目的倒置’(goal displacement)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는 물론 지정학적이고도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본래의 목적은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선 비무장지대는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안보의 최전선을 민간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 국한된 주장이 아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광 그 자체가 대북한 안보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김학준, 1996 : 4~11). 이스라엘이 연간 500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아랍국 국가들의 공격에 대비한 ‘人質’로 적절히 활용하듯이, 비무장지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면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自制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 관광산업의 추세는 테마 여행(theme tourism)이다. 현재의 휴전선 일대는 테마 관광의 대상이 되기에 매우 적격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분단이 끝나고 통일이 되더라도 수십년 동안 민족을 둘로 갈라 놓았던 역사적 흔적들을 관광지로 보존하는 일은 후대를 위한 민족사적 과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민통선 지역 또한 外地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좋은 곳이다. 예컨대 양구군 亥安盆地와 같은 민통선 이북의 민간인 거주지역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결코 아니다(함광복, 1996 : 68~89 ; 전경수, 1996 : 40~45). 그곳은 다양한 지역출신과 서로 다른 계급들이 특이하게 융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문화와 민간문화가 마

찰없이 합성되어 있는 ‘한국版 화채 그릇’(melting pot)이다. 그리하여 민통선 마을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여지는 실로 무궁무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회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된다. 한 특정지역이 無人村으로부터 점차 사회를 형성시켜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실험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구 편치보울내의 해안마을이 龍仁 민속촌과 같이 훌륭한 관광명소로 개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민속촌처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존만 하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태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은 접경지역내 자연환경이다. 국내에서 강원도 접경지대 만큼 개발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도 드물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자연에 방치된 지역’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무장지대가 매우 희귀한 자연과 야생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비무장지대는 식물, 동물, 조류, 어류, 곤충 등이 자연 그대로 서식하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현장으로서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생물의 온상이다(성천문화재단, 1996). 따라서 그 자체가 天然의 연구실이면서 동시에 生態觀光(eco-tourism)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강력한 保全 논리의 기초가 된다. 비무장지대만은 통일과 무관하게 가급적 지금 현재 분단상황에서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은 절대 금물이다(함광복, 1996 : 71~73). 그 지역은 분단 이전 농업이 발전하여 인구밀도가 높았던 곳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전투로 인하여 인간에 의한 환경변화도 많았다. 휴전 이후에도 비무장지역은 외형상 적막강산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은 곳이다. 인구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숨은 인구’ 곧 군인이 상주함으로써³⁾ 환경오염이 불가피했고 군사적 목적에서 視界나 射界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환경파괴도 충분히 짐작할 수

3) 예컨대 화천군이나 양구군의 경우 군인인구는 민간인구를 능가한다.

있는 지역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무장지대는 천연의 자연생태계라기 보다는 ‘한국전쟁 자연생태계’일 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보존 논리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무장지대의 많은 부분은 이미 파괴되거나 오염되었다.⁴⁾ 실제로 보존할 대상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말이다. 동부전선 향로봉 동쪽 고산지대를 빼놓고는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비무장지대는 없다. 保全論者들이 진실로 비무장지대내 생태계의 보존을 바란다면 그들이 먼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현재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하는 병력 및 군사시설이 자행하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는 일이다. 비록 군사작전이라고 하여도 전문가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국방부 環境課의 위상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게다가 현지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더 이상 외면할 명분도 없다. 강원개발연구원이 1995년 6월에 도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의식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강원도를 지역적으로 접경지역, 탄광지역, 해안지역, 그리고 내륙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여건 만족도는 접경지역이 탄광지역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 가운데 42.8%가 ‘개발위주’의 지역발전을 선호했으며 ‘보존위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15.9%에 머물렀다(강원개발연구원, 1996 : 75, 83).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왜 他지방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기회’가 억압되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가? 따라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를 먼저 확실히 구분한 다음, 보존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4) 군부대에 의한 비무장지대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 연구보고서는 아직 없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가 1995년부터 1년반 동안 전국 31개 부대 60개 단위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야별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예컨대 47개 곳에서 汚·廢水의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38개 곳에서 사격장 및 유류시설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한겨레신문, 1997.5.3).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고 중화확 무기가 많이 배치된 전방부대의 사정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임에 틀림없다.

서는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생태보호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구분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국립공원의 지정을 포함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포괄적인 환경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조현길, 1995 : 10~16 ; 김계중, 1995 : 19~26 ; 이장희, 1995 : 37~40, 권기현, 1996 : 3~7 등 참조).

둘째는 현재의 접경지역 및 강원도를 의도적으로 개발하여 통일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일이다. 이는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강원도로 하여금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측의 계획은 수차례 마련된 바가 있다. 또한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과의 원칙적인 동의를 마련하기도 했다(민족통일연구원, 1992 ; 통일원, 1993).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비무장지대의 명실상부한 비무장지대화 혹은 평화지대화를 전제로 하여 각종 생태계 조사, 자원조사 및 공동개발, 관광특구 개발, 공동 핵발전소 건설 및 平和市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성호, 1997).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이러한 정부의 제안은 그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그 원인의 일부는 그러한 제안이 다분히 대북공세적인 측면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적 발상 보다는, 현재 주어진 북한의 정치적 입장과 공간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우리 나름의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소위 '연계성 강화'의 원칙하에서 광역적인 국토개발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원 외, 1989 : 13~53 ; 주종원 외, 1994 : 5~26).

이런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강원도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이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원도는 통일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북부지역 개발론을 활발히 개진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예컨대 문산을 평화시로

만들고 의정부를 통일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1996 : 55~57 ; 신원득, 1996 : 3~23 ;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1995). 이러한 내용은 곧 최종 확정을 앞둔 「수도권정비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북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배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와 경쟁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의 특성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 난민의 유입문제는 강원도보다 경기도에서 훨씬 심각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남한으로 유입될 인구는 적게 잡아 100만 명(선한승, 1995 : 166~170), 많을 경우는 380만명(주종원 외, 1994 : 21~22), 그리고 더욱 많게는 400~500만명까지(박양호, 1996 : 24~25)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수도권이 위치한 경기도가 될 공산이 높다. 그러나 강원도로서도 북한 난민의 무제한적 남한 유입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⁵⁾ 특히 북한 난민들의 수도권 진입이 어려워질 경우 강원도 산간지역이 대안적 관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강원도 북부에서도 경기도 북부와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몇 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 역시 강원도 접경지대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라 말할 수 있다.

통일시대에 강원도가 남북의 관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 지금 당장 가장 유망한 종목은 원산 및 금강산을 한데 묶는 강원도 북부 관광단지의 조성으로 보여진다. 이미 북한에서도 원산 및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있으며, 개방을 하지 않고도 外貨를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분야가 관광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은 잘 인식하고 있다(윤창운, 1995 : 95~117). 그리고 그곳은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고립되어 관광산업의 발전에 의한 체제의 불안이 적다는 利點도 있다. 아울러 동해안 북쪽 배후에는 현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5) 통일이 될 경우 북한주민의 40%가 걸어서 5일 이내에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조선일보」 1996.10.25

가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에너지지구(KEDO) 주도하에 경수로 지원사업도 목하 추진중이다.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산 및 금강산 일대가 북한 지역내 최대 관광단지로 육성될 개연성은 매우 높다(주중원의, 1994 : 11~12). 강원도의 관광정책은 따라서 북한 지역 강원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할 준비를 갖추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설악산과 동해안 지역을 북한의 금강산이나 원산만 일대와 패키지로 묶는 관광산업 정책이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성을 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남북 강원도 통합 관광단지의 길목으로 개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는 속초와 원산을 잇는 海路개발을 통하여 관광교류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강원도 북부 및 동해안 지역 관광지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개발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강원도의 관광단지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면 그것은 제주도 면적을 능가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과 세계로 부터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관광의 범위가 두배로 확대되는 만큼 숙박 및 위락시설의 규모도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비한 강원도의 관광정책은 단순히 분단 이후 끊어진 교통망의 연결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욱이 작금의 세계화·지방화 추세하에서 강원도가 동북아지역내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미 환동해권의 지방간 교류·협력 전략으로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소위 카르텔(KAR-TELL, Kangwon-do's Active Role Toward East-sea rim's Local Leaders)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중이다(김건석, 1995 ; 多賀秀敏, 1995 등). 강원도가 이렇듯 종래의 변방에서 중앙으로 탈바꿈하고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 교통시설의 발전이 급선무이다. 강원도 발전의 지정학적 제약이 사라지고 나면 지형적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동서고속철도 및 영동(양양) 국제공항의 신설과 동해항만 확충 등 소위 '트리포트'(tri-port) 구축은 이 시점에서 강원도나

중앙정부가 합심하여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임승달, 1995 : 40~45). 통일이 되면 강원도 북부지역은 우리나라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앙이 된다. 중앙이 되는 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면 남북한이 순리적으로 결합되는데 장애가 될 것임은 明若觀火한 일이다(「강원일보」 1997.6.5 사설).

셋째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강원도의 구상과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통일한국 시대에 강원도는 국가적인 중심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인류학자의 지적처럼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면 남북을 잇는 발전의 축 또한 그 의미가 같이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전경수, 1996 : 43~44). 그 대신 통일국가에서 한반도 개조론의 중심축은 동서로 그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단순히 서울과 평양이 재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서울과 원산을 경유하여 청진을 잇는 동서 축이 미래의 한반도를 위한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축은 분단시대의 발상으로서 통일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듯 통일이 한민족의 새출발을 의미할 경우 통일한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동서 축 선상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최적지는 바로 강원도 땅, 특히 역사적 古都인 平康과 鐵原을 묶어 신도시 ‘平原’(평화의 들)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전경수, 1996 : 44). 그리고 이와 같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당장이라도 통일원과 같은 정부부처나 민족통일연구원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강원도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 주무부처나 국가적 통일연구 기관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현장감각 상실을 자초하고 방치하는 일이 될 것이다.

V. 결 론

강원도는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존재하는 전국 유일의 도단위이다. 따

라서 한반도를 통틀어 민족분단의 고통을 강원도 만큼 뼈저리게 체험하는 지방도 없고, 강원도 보다 민족통일을 더 강렬하게 열망하는 지역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강원도는 해방과 더불어 경기도와 함께 남북분단을 직접 경험하였으나, 경기도가 이마를 날려버렸다면 강원도는 허리가 잘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분단시대에 들어와 강원도는 남북대치의 최전선이 되었다. 강원도는 또한 60년대 이후 전국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결국, 강원도민에게 있어서 민족분단의 아픔은 他道民에 비해 두 배였던 셈이다.

그러나 분단의 시대가 가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강원도는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외부적 환경이 고무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 시대에 안보논리 때문에 강원도의 발전이 낙후되어 온 것도 역설적으로는 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강원도는 개발의 惠澤도 적었지만 개발의 弊害도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자 세계화 시대이다. 분단 시대에 강원도가 민족의 고통과 지역의 고난을 이중적으로 겪었다면, 통일 시대에는 강원도가 민족의 화해와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他地方에 비해 기쁨 또한 두 배로 구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통일로 인하여 강원도가 잃어버릴 것은 철조망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강원도의 시각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안보와 경제성장 시대에 강원도민이 경험한 고통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상대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설 국가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들도 분단시대 강원도의 특수한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도덕적 자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휴전선 일대를 개발하려던 소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은 지금 현재 크게 표류하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보류된 것에 이어 정부는 최근 이를 아예 전면 백지화했다(한겨레신문, 1997.5.12). 자연생태계 보전과 민감한 남북관계가 그 이유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만에 다시 신한국당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대선국면에서 유야무야 상태에 놓여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국토에서 유일하게 남은 휴전선 일대…그리고 자손만대에 남길 민족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조선일보」, 1997.5.16). 이런 주장이야말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卓上空論式 통일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존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보존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 생태계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서울사람들을 위한 강원도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지방화 시대의 표본이며 강원도 식민지화의 再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빛나간 통일정책의 상징이기도 하다. 강원도민이 바라는 것은 각별한 특혜가 아니다. 타도민이 누리는 정도의 정당한 대접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바랄 뿐이다. 한 특정도민의 가슴에 한을 남기고서야 어찌 민족통일이라는 말이 완전한 의미를 갖겠는가?

참고문헌

- 강원개발연구원(편), 1995. 강원발전의 과제와 전망 (춘천:강원개발연구원).
- 강원개발연구원, 1996. 江原道民 意識調査 (춘천:강원개발연구원).
- 강원도, 1990. 강원도 장기개발 전략계획 (춘천:강원도).
- 강원도, 1995. 江原道史:현대편 (춘천:강원도).
- 강원도, 1996. 江原道史:역사편 (춘천:강원도).
- 경기개발연구원, 1996.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원:경기개발연구원).
-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1995.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지역개발의 방향,

-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 (1995.12.6, 의정부시 청소년회관).
- 권기현, 1996. “강원도 접경지역의 현황과 과제,” 강원포럼 11월호.
- 권기현, 1997. “민통선지역의 보존/개발 방안 : 국토계획적 차원에서의 DMZ 및 인접지역의 관리방안,”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제2회 DMZ 학술회의 발표논문 (강원도 전방 某부대 OP, 1997.4.28).
- 김건석, 1995. “일본 동해(일본해) 연안지역의 환동해권 교류/협력 전략과 강원도의 대응,” 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 창립기념세미나 논문 (1995.12.6, 춘천 공영빌딩).
- 김계중, 1995. “한민족의 평화를 위한 자연보존지역 시스템과 새로운 삼천리 금수강산,”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토론마당 논문집.
- 김 원 외, 1989.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국토계획 24권 2호.
- 김재한(편), 1996. DMZ 정치학-현황과 추세 (춘천 :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 김종규, 1996. “민통선 북방지역의 지리적 특성,” 성천문화재단(약음),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 김학준, 1996. “DMZ 평화화 구상,” 김재한(편), DMZ 정치학-현황과 추세.
- 多賀秀敏, “환동해(일본해) 연구에 있어서의 한 시각 : 국제정치분야,” 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 창립기념세미나 논문 (1995.12.6, 춘천 공영빌딩).
- 문석기, 1996. “DMZ 개관 :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경학회/중앙개발 주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박명립,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 결정과 발발 (서울 : 나남).
- 박양호, 1996. “접경지역개발과 보전의 필요와 방향,” 강원포럼 11월호.

-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토론마당 논문집 (1995.8.11, 서울 세종문화회관).
- 선한승, 1995. “환경친화적 산업기지 개발-북 이주민의 대량 남쪽 유입
· 실업자문제 예상,” 월간 태백 9월호.
- 성천문화재단(엮음), 1996.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서울:현암사).
- 신원득, 1995. “통일후 경기북부 지역의 과제와 전망,” 경기연구 1호.
- 임승달, 1995. “고속철도, 항만, 공항 ‘트리포트’ 구축을,” 월간 태백 4월
호.
- 오진모, 1995a.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의 과제와 전략-강원도발전을 중심
으로.”
- 강원개발연구원(편), 강원발전의 과제와 전망.
- 오진모, 1995b. “남북강원지역 경제협력 방안,” 강원개발연구원(편), 강원
발전의 과제와 전망.
- 유재인, 1974. 江原道秘史 (춘천:강원일보사).
- 윤창운, 1995. “남북한 관광협력 방안-관광지 개발과 협력사업,” 토지연
구 7/8월호.
- 이장희, 1995. “비무장지대의 자연공원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본문제,” 비
무장지대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토론마당 논문집.
- 전경수, 1996. “접경지역 사람들의 어제, 오늘, 내일,” 강원포럼 11월호.
- 제성호, 1997. “비무장지대와 평화조성방안: DMZ의 평화적 이용문제를
중심으로,”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제2회 DMZ 학술회의 발표
논문 (강원도 전방 모부대 OP, 1997.4.28).
- 조성운, 1997. “일제하 강원도 삼척지역의 혁명적 노농운동,” 한국민족운
동사연구 15.
- 조현길, 1995. “민통선 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과 대안,”
강원포럼 11월호.
- 주종원 외, 1994. “북한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29권 4호.
- 최상철, 1996. “비무장지대의 잠재력과 보전/개발 방향,” 한국조경학회/

중앙개발 주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발표논문.

통일원, 1993.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 : 통일
원).

함광복, 1996. “DMZ의 사회학적 이해,” 김재한(편), DMZ 정치학-현황
과 추세.

Bruce Cumings,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